

44% → 41% → 15%... 20대 국회, 법안통과 ‘좁은문’

〈18대 국회〉

〈19대〉

〈20대〉

가결안 2050건, 1만3000건 계류
국회운영개선소속 48개 현안논의
임시국회 의무화·상시운영안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법안 통과율 때문에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메트로신문의 의안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 가결안은 총 2050건, 계류 의안은 1만3000여건으로 조사됐다. 법안 통과율은 15%로, 이전 국회 법안

통과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8·19대 국회는 각각 44%,

41%를 기록한 바 있다.

법안 통과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국회도 대비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48개 현안 논의에 나섰다.

이번 회의의 주요안건은 양승조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 소위원회는 소관 법률안과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결산안의 경우 제출 날짜와 심

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법률안의 경우 기한이 없이 수시로 발의된다. 이때문에 법안 심사도 상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양 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원회’에 대해 임시국회 회기 중 최소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법률안 심사를 활성화해 본 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늘린다는 취지다.

표 의원 등 15인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더 나아가 법안심사소위를 회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의사

일정을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상임위의 경우 의사일정 날짜보다 회수를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국회는 의사일정 날짜를 정해 위원회를 운영하지만, 대부분 위원회가 정쟁 등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일정 기준을 현실화해 날짜보다 개최 회수를 기준으로 뒀다. 상임위 위원장은 매월 의사일정을 공표해야 한다. 의사일정 준수 여부를 국민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시민단체, 바다로 먼저 뛰어든 퍼스트 펭귄” 한미정상회담 기대감... 文 지지율 ↑

文 대통령, 시민단체 대표 靑 초청

“단체의 노력, 사회정책 도울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가운데, 문 대통령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때 “사회문제 해결의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발전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용기를 내어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증진시켜 온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사회 곳곳에 정착되도록 정부도 더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경제정의·양극화·인권·성평등·환경·생태·소비자 보호·남북관계·기후변화 대응 등 우리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전 지구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졌다. 우리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했다. 촛불혁명의 주역이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다. 지금까지를 매서운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되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촛불시민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2년간 행보와 관련해 시민사회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함이다.

정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언급한 ‘퍼스트 펭귄’에 주목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추운 바다 위에서 사는 펭귄들은 보통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펭귄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문제는 물고기가 있는 그 바다에 범고래 등 펭귄 입장에서 천적들이 즐비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펭귄 무리 중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든

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한다. 이 말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구자 역할을 뜻한다”고 했다.

이 여권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퍼스트 펭귄’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시민단체가 그동안 국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경제민주화·정치개혁·복지·여성·청년·소비자·인권·환경·자원봉사·중간지원조직 등 각 분야 70개 단체의 80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활약한 후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미혁·김상희·남인순·박주민·이재정·정춘숙 의원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전주대비 0.6%p 오른 47.7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월 한미정상회담 기대감에 따라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 비핵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그달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3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9%)’를 조사해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0.6%p 오른 47.7%, 부정평가는 1.0%p 내린 46.2%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4월 한미정상회담 기대감’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4월 10일부터 그달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윤 수석비서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한미간 공조 방안에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회의에서 이철희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험상황 알리는 ‘똑똑한 가로등’ 개발

정부, 스마트 도로조명 연구 착수

첨단 기술이 도입돼 위험 상황을 알리는 ‘똑똑한 가로등’이 개발된다.

국도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이하 R&D)’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로 가로등의 기능을 조명뿐만 아니라 사고, 결빙, 정체 등 도로환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4개 부처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가로등과 같은 도로조명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해 도로상위 현상 상황을 직접 수집·판단해 ‘디지털 사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I2X(인프라와 사물 간 무선 통신) 기술로 주변 행인과 차량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터널 등 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가 즉시 대처할 수 있다.

국도부에서는 도로조명 플랫폼에서 제공할 서비스 전략수립과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농관원, 집단급식소 단속 원산지표시 위반 71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올 국회예산 6409억... 전년비 5.9% 증액

인건비 59.9%, 사업비 36.1%

국회사무처가 예산낭비 근절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국회의원 수당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사무처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에 따르면 2019년도 국회 예산은 6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5.9%(357억원) 늘었다.

인건비가 59.9%(3815억원)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주요사업비는 36.1%(2311억원), 기본경비의 경우 4.4%(283억원)로 책정했다.

국회의원 보수총액도 연 1억517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연 182만원, 월 15만원 올랐다. 모두 수당과 활동비로 구성됐다. 특히 공무수행출장비의 경우

의원 1인당 배정액은 지역구마다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100만원가량 증액했다. 공무수행출장비는 의원이 공무수행출장 시 철도·항공·차량 등을 사용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다.

공무출장비는 올랐지만, 입법·정책 개발비는 감액했다. 올해 입법·정책 개발비는 83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줄었다. 의원실당 평균 지원비용은 2713만원으로, 역시 100만원가량 준수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수행출장비 등을 올린 이유에 대해 “그전부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회 혁신자문위원회 의견을 통해 (교통비) 단가 현실화 차원에서 (비용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대성 기자